

생산자물가 28년만에 최대폭 상승... '금리인하 신중론' 확산

4월 생산자물가지수 2.5% 상승
석탄·석유제품 등 공산품 가격 급등
금통위 경제전망·점도표 변화 주목

4월 생산자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물가경계감이 한층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경계와 정책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명분은 더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생산단계 물가 쇼크

21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2.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9% 올라 2022년 10월 7.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공산품이 주도했다. 농림수산물품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내려 전월 대비 1.0% 하락했지만,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각각 31.9%, 6.3% 오르며 4.4% 상승했다. 서비스도 운송서비스와 금융및보험서비스를 중심으로 0.8% 올랐다.



사진/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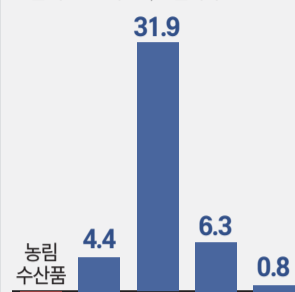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전월대비증감



주요품목 증감률

4월 기준. 단위: %, 전월대비



자료/한국은행

비용 압력이 생산단계 앞쪽에서 강하게 나타난 점도 부담이다.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2%,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특히 원재료가가 28.5%, 중간재가 4.3% 오르면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원재료·중간재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전월 대비 20.7% 올랐고, 폴리에틸렌수지와 폴리프로필렌수지도 각각 33.3%, 32.0% 상승했다. DRAM은 전월 대비 37.8%, 전년 동월 대비 39.0% 급등했다. 석유·화학제품은 비용

물가 압력을 키우는 반면, 반도체 가격 상승은 수출과 성장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적 흐름이다.

◆ 연준도 인하 신중

미국발 변수도 한은의 선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연준이 공개한 4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2% 목표를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이 비료와 일부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는 진단도 나왔다.

통화정책 기조도 당분간 완화 쪽으로 기울기 어려워 보인다. FOMC 참석자들

은 높은 물가와 중동 분쟁의 지속기간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정책 기조를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물가가 2%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추가 긴축이 적절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는 한은의 5월 금통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생산자물가가 급등해 비용 전이 우려가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의 완화 시점이 늦어지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이 유지돼 다시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 기준금리보다 점도표가 핵심

최근 한은안팎에서는 이미 금리인하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인하를 멈추고 인상 가능성까지 고민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성한 전 금통위원도 임기 종료 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 관심은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5월 금통위에서 제시될 경제전망과 점도표 변화에 쏠린다. 생산자물가 급등과 FOMC 의사록의 물가 경계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2월 점도표에 남아 있던 금리인하 가능성이 5월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5월 금통위는 한은이 고유가·고환율의 물가 전이 압력을 얼마나 크게 반영할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생산자물가와 연준 의사록이 동시에 물가 경고를 키운 만큼, 금통위원들의 다음 금리 경로도 이전보다 위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통위는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재경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박차

상반기 내 편입 로드맵 과제 70% 이행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일정 등 살펴

우리 정부가 펀드 국제투자의 기준점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시도한다.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 개편 과제의 70%가량을 상반기 내 완성해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TF(전담반) 회의에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과제 39개 중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상반기 중 총 28건(71.7%)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으로 꼽

혀 온 계좌 개설 및 결제 절차 등을 개선했다.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한 번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결제는 투자자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약결제원 시스템을 바꿨다.

또 외국 법인이 국내 계좌를 만들 때 국제표준법인식별번호(LEI) 확인서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이들의 번거로운 공증 부담을 덜었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와 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도 폐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핵심 과제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에 대한 일정도 살폈다.

24시간 외환시장은 다음 달 29일 시범 거래를 거쳐 오는 7월6일 개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해외 금융회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원화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달 IT 테

스트와 오는 9월 시범운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해외외국환업무추진기관(RFI)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됐다. RFI는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등록과 보고 부담을 줄이고 야간 거래를 더 용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가 여러 국가 거래를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허장 차관은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제부 운영상황까지 꼼꼼히 점검해 시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약결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홈플러스, 긴급 운영자금 확보 '적신히'

메리츠금융, 신규 대출 사실상 거부

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대주주 책임론을 앞세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6월 말 예정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의 익스프레스 영업양도 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약 한 달간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

(브리지론)을 메리츠금융에 요청했다.

4월 급여를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급여일인 이날까지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홈플러스 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개인 이행보증을 서고 추가 담보 방안까지 제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나 메리츠금융은 김광일 부회장의 이행보증만으로는 신규 대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일축했다.

메리츠금융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김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집행하는 절차이므로 대주주가 통제할 여지가 없으며, 이행 주체인 홈플러스와 김광일 부회장이 개인 보증까지 서며 절박하게 노력하는 상황을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단기 대출인 만큼 관리인의 이행보증과 복수의 담보장치, 회생절차상 DIP 대출 보호막으로도 상환 안정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정부, 중동 주요국가 60억달러 금융지원

공급망 회복 위한 전략적 비용 부담 강조

정부가 일부 중동 국가에 총 60억 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산 제품·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서아시아 지역 내 주요 발주처가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들 국가의 유동성 개선을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TF(전담반)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선금융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0억 달러씩 맡아 도합 6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다자개발은행(MDB) 등이 연계된 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중동지역 긴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생산혁신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을 검토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2030년까지 5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품목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조치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인도·아세안·몽골 등과의 협상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춘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도 조속히 추진해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다. 향후 예정된 양자협의 절차에서도 기존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